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4-2호

발행일: 2024. 1. 19. (금)

제411회 국회(임시회, 2023. 12. 11. ~ 2024. 1.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 나.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 활성화
- 다. 동물복지 및 보호 강화
- 라. 마약류 규제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1회 국회(정기회)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모두 10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1회 국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3)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11회 국회의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0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정무위원회(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	교육위원회(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등 10인
6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국방위원회(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3인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1인	
1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 의원 등 10인	
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등 10인	
20		외교통일위원회(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장
2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2인
22		행정안전위원회(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3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3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등 17인	
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등 15인	
36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6인	
37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 의원 등 183인	
38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김용판 의원 등 13인	
3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이만희 의원 등 10인	
4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	
4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 등 11인	
42		문화체육관광위원회(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4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 등 11인
4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5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 의원 등 10인	
4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8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9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0	소관위원회(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6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등 13인	
5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1인	
5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2인	
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6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등 10인	
62		보건복지위원회(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6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9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0인
7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 등 10인
7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 의원 등 11인
7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0인
7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0인
7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 의원 등 10인
79		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0인
8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 의원 등 10인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등 11인
8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6인
8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2인	
8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1인	
85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6	환경노동위원회(9)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9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9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9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0인
9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9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의원 등 11인
95	국토교통위원회(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0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우주 개발 및 우주산업 활성화, 동물복지 및 보호 강화, 마약류 규제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개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을 비전으로,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4대 전략 및 12대 과제인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3월 각 부처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전략과 2030 NDC 이행 로드맵 등이 포함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4월 10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회도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입법을 행하였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1-1호 2050 탄소중립](#), [제2023-9호 국외 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활성화](#) 이슈 등 참고).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는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도입되는 등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2024-01-09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p>	
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u>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u></p> <p>...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후는 2023년 현재 전 세계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뭄·폭우·고온 등 다양한 자연 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이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정부는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 Carbon Capture Storage)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활용(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술전망 보고서에 제시된 2°C 시나리오(2DS)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이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 감축에 14%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프랑스·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p>	2024-01-0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과제목표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년 예산)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공간·이동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 등 탄소중립 공간 조성
-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철도·항공의 저탄소화 등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③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 **(기본계획)**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23.3) 및 10대 부문별¹⁾ 감축목표 설정
 - * 전력,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CCUS, 수소, 국외감축 등 10개 부문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조정방향·할당방식 등 포함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조기 수립²⁾ 추진('23.下)
 - * 법상 수립기한('24년말) 대비 1년 앞당겨 추진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 배출권 제3자 시장참여 단계적 확대, 거래형태·상품 다각화³⁾ 추진
 - *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검토
- **(핵심기술)**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전원 등 산업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감축기술 R&D 지원⁴⁾
 - *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23~'30년간 9,352억원), CCUS 기술 상용화('23년 942억원) 등
- **(산업단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⁵⁾ 추진
 - * 친환경 에너지 보급,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 구축(~'27년 157개)
- **(신무역장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¹⁾ 시행('26) 전까지 EU 협의 강화 및 철강 등 업계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²⁾ 마련('22.12)
 - 1) EU 내 수입업자에게 수입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부담 부과 제도
 - 2) 탄소배출 측정 및 검증기준 기반 강화, 배출량 산정 DB 구축, 탈탄소 기술개발 지원 등

출처: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② 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뒷받침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포인트계*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 * 하반기중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중 +8억원 확대
-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시장활성화 방안¹⁾을 마련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²⁾」 수립 추진
 - 1)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 연계 투자상품 다양화, 이월한도(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 완화 등
 - 2) NDC 목표를 감안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배출효율기준(BM)할당 확대 등

③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추진

- (공공부문) 정부·공공기관(건물·수송 분야 등)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 수립(23.12)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하여 탄소중립 기술·제품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 아이디어토(Idearo) 등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활용하여 발굴
 - 저탄소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의로운 전환특구를 지정하고 (2개소 내외), 재편대상 사업·기업 등 구체적 지원기준 마련
- (기업·기술지원)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 확대 수립
 - * (現)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 (改) 태양광, 탄소중립 선박 등
 - 업종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철스크랩¹⁾, 다회용기²⁾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에너지 절약 및 연관산업 활성화 도모
 - 1)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물량확보 및 해외유출 예방 추진
 - 2) 제조세적 위생기준 마련, 전국 지역지원센터 세척사업단 지속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유행병로 표준화된 정책방향 제시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 1. 4.)

- (건물)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마련(24년)하고,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
 - 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 확정(24.1)
 - * (現)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개별적으로 운영
 - ** (現) 공공건축물 5백㎡ 및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신축 시 ZEB 인증 5등급 의무취득
- (산업)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혜택을 강화하고, CCUS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추진
 -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

5 녹색금융·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

- **(녹색금융)**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용자·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 강화
* 투자·용자·보증(조원): (23)27.1 → (24)30.9 ** 이차보전(억원): (23)400 → (24)552.6
- **(배출권제)** 유상할당·BM할당 확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 NDC를 감안한 「제4차 기본계획(26~35년)」을 '24년 내 수립
 -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24년)하고, 이를 토대로 배출권시장의 금융기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추진
 - * 시장참여자 확대, 선물 등 파생거래 도입, 경매제도 개선(유상할당 확대 등) 등
 - * 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추진
 - * 기업이 혁신적 저탄소기술 도입시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 연구용역·부처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구체화(적용분야·검증방식 등)
- **(기후기금)**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 개편
- **(환경정보)** ESG공시 국제표준 반영 환경정보 공개항목을 개편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시기에 맞춰 공개시기 조정(12→8월)
- **(탄소중립포인트)** 소비자 적립포인트의 입점비율을 판매자에게 추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포인트' 신설, 소상공인 참여 유도
* (예) 텀블러 사용시, 소비자 포인트(300원) 외에 소상공인 포인트(30원) 추가 제공

출처: [2024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안: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범위 확대 등](#) 2023. 2.

[김영진 의원안 등: 유상할당 원칙의 명시 및 시장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등](#) 2023. 9.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 2.

[이철규 의원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수송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추진...거래 참여자 늘리고 거래 상품 다양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의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멀티미디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6. 11. 16.

이 글에서는 CCS의 개념과 주요국의 CCS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CCS 기술 개발현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KEI 정책보고서 2022-01 2022. 1. 31.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 마련이 중요한 현안이 됨

○ 정부의 추진전략은 국가 현실과 미래를 고려해 어떤 단계로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탄소중립은 대전환적 비전 공유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시장·정책·기술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포용적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즉, 탄소중립은 대전환적 관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부 추진전략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추진전략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역할이 특히 중요함

○ 본 연구는 대전환 관점의 바람직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함

○ 정부 부처별 병렬적 추진전략을 극복하고 전략 간 연계 및 환류, 전략 이행의 국가 환경 조성을 반영하는 활성화 방향을 모색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한국환경연구원 KEI 연구보고서 2017-05 2017. 10. 31.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탄소시장의 특징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동시에 2010년 이래 정부가 추진한 총체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정책 결과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에서 배출권총수량이 어떤 위상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 운영 측면에서 국내 배출권 총공급 구성을 정의하고 이를 총수요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장규모 및 작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 거래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국가온실가스 감축현황 부분에서는 배출량 주요요인별 감축효과를 부문별로 분석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배출량과 GDP 간 비동조화(Decoupling) 분석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 활성화

개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개발은 1986년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1989년 항공우주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과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주 선진국에 비해 30여 년 이상 늦은 출발이었지만, 정부는 우주개발이 대표적인 중장기 프로젝트임을 인식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주개발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의 수많은 노력과 협력이 이뤄졌음은 물론이며, 우주분야 학계와 공공 및 민간의 전문성도 지속 축적되어 왔습니다. 국회는 최근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11호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Ⅲ](#) 등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4-01-09 (원안가결)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또한,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 개발 추진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주요 내용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 추진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달 궤도선발사,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7. 15.)

- (국가주도분야 : 기술이전)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은 기업에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
- 관련기업·발사장 집적 지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22. 8월, 우주위)하고, 우주 탐사, 한국형위성항법(KPS)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 촉진
- * 국내최초 달궤도선 발사(22. 8월, 플로리다), 국내최대규모 KPS 사업 착수(~35년, 3.7조원)

□ 장애요인과 대응방안

-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의 본격화 위해,
- R&D·산업·안보·외교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수립(22. 12월)하고,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 반도체 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민관총력체제를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장비·인프라 등을 연계·공동활용하는 체계 구축 (22. 하반기, 반도체 팹(Virtual Fab)을 시작으로 확산)
- *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KAIST 종가원, ETRI 등 10여개 기관 나노랩 연계 ⇒ 교육·연구·기업 지원 강화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1. 26.)

1.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 개별기술(위성 발사체) 확보 넘어 산업생태계 본격 조성

- (독자적 우주탐사기술 고도화) 누리호 3차발사(23. 1.), 재사용 기술과 다단연소 엔진 적용 차세대발사체 개발 본격 착수(23~32, 2조 132억원)

- 달 궤도선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고, 달 표면 연착륙 실증과 임무 수행으로 탐사역량 강화('24~'33, 6,286억원)
 -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예타 추진('23년)
- 랑데부·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 및 포집위성, 달 궤도 투입성능검증위성, 부품검증위성 등 기술검증위성 개발 추진('23)
-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제 구축) 전용펀드('23, 50억원), 우주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23.7) 및 위성 활용 등 우주서비스 산업 창출**
 - 로드맵 바탕으로 우주개발 핵심기술 및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추진
 - ** 위성활용촉진법 제정('23.하)
-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및 국가안보 대응력 강화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추진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 예타 추진('23) 등 민간 개발역량 제고
 -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 우주기술연구센터육성 시범사업* 기획('23), 공공연구시설·장비 조사 및 공개 등 우주산업 기업 및 인력양성 지원
 - 소형(연2억), 중·대형(연5억)으로 10년 장기지원, 우주뿐 아니라 타분야 융합분야 지원
- (우주항공청 설립) 상세업무·특례규정 등의 일괄타결 및 향후 설립취지 따른 안정적 운영성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상정('23.상) → 직제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23.하)
- 우주항공기술 및 제도, 기술사업화 등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및 의견 수렴
 - (자문단 운영안) 1백여명의 전문가 자문단 pool 구성 → 릴레이 간담회 개최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안: 우주청 신설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개편](#) 2021. 11.

[정부 제출안 등: 우주전략본부 설치 등](#) 2023. 5.

[김민석 의원안: 국가우주위원회 구성 변경 등](#) 2023. 12.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 4.

김정호 의원안: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 신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 5.

정부 제출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 12.

김민석 의원안: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우주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20230919\)](#)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 자료집\(20230913\)](#)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보도참고\]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국가 미래 성장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 후속조치 착수...“2045년 우주강국 도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향한 전략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2018. 11. 20.

이 보고서는 현재 우주항공 정책 및 국내외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역량 확보 및 신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우주항공 기술산업은 ▶ 스마트/맞춤형 기술개발 지향 ▶ 소프트융합 중심의 개방형 생산시스템으로 진화 ▶ 민수주도를 통한 타산업 기술혁신 확장 등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로 일컫는 소규모, 저자본 민간 우주개발기업들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세계 우주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항공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드론산업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동임해지역 등 제조업 집중 지역의 생산활력이 떨어지는 전통 주력산업 위기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가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아직 국내 산업 규모는 미약하지만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ICT 강점을 우주항공 산업과 융합할 경우 니치산업 및 신산업 창출에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보고서는 ▶ 우주항공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우주항공 글로벌 시장개척 및 신산업 진흥 ▶ 우주항공 융합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향한 전략과제로 제안하면서 10가지 실행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다. 동물복지 및 보호 강화

개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동물 학대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정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반려동물·농장 동물·실험동물,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기관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많은 논란이 있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눈길을 끄니다. 해당 법률안 통과 이후 관련 업계 종사자와 개 식용 종식에 반대하는 견해의 강한 반발이 있으며, 추후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이 제기될 여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종사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p> <p>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확대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도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 등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사육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폐업한 개사육농장 농장주의 폐업·전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p>	2024-01-0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과제목표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22. 8. 10.)

㉔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 개요

- 반려인구는 늘었으나, 동물복지·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인식 차도 커 **사회적 갈등** 존재
 - * 동물학대 5,497건, 개물림사고 2,197건, 유기·유실동물 118,273마리 ('21)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동물복지)** 동물학대·유기자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자체 직영보호센터('21. 68개 → '27. 113) 등 **동물보호 시설** 확충
 -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 ('18) 징역2년 / 벌금2천만원 → ('21) 3년 / 3천만원
- **(개식용)**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을 위한 설명·설득 등 사회적 대화 지속
- **(안전관리)** 반려견 및 맹견(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 물림 사고 **예방** 강화
 - ▶ 맹견: ('19) ^①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 이탈 방지 ^②맹견출입금지장소 지정, ^③안전조치 위반 사고시 벌칙(사망 3년/3천만원, 상해 2년/2천만원), ('21) 맹견보험 가입 의무
 -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일반견은 필요시),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24.~)
- **(진료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중요 진료비 **공시**, 중대 진료(수술 등) **예상 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 * 지역별로 소비자단체 등과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23.상반기 1차 발표)
 - **표준수가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가능성 신속 검토('22~'23)
- **(산업육성)** 미용·펫푸드 등 유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산업 기준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 마련('22.12)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23. 1. 4.)

4-3 동물복지 강화

◇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

- 학대·유기 등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정책 확대 및 사후조치 실질화
-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 반려동물 양육자 돌봄의무* 강화 및 입양 전 교육** 확대
 - *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주인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짧은 목줄 금지 등(23.4)
 - ** 입양예정자 대상 온라인 강의(22) → 산책배변 등 펫티켓 현장실습 제공(23~)
 -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22: 34억원 → 23: 38) 및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23.4)
-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및 준수사항 강화(건강상태 확인 등),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23.4월)
- 맹견·사고견을 관리할 수 있는 기질평가제 도입(23: 시범사업 → 24.4월 시행)

□ 피학대·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및 입양 등 사후조치 실질화

-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마련(23.1)
- 유기동물 보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23. 신규 11개소), 민간 동물 보호시설 개선(23. 18억원) 및 전문입양센터 신설(23. 2개소)
 - *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도입(23.4)에 앞서 입지·시설 등 개선방안 마련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사회적 수용성 등 추진기반 마련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1 연구 → 23.末 법안 마련)
 - * (동물복지 요소) 돌봄의무 강화, 생산·판매 제한 등, (법체계) 명건법 등 분법 검토
- 동물보호단체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 협업 강화(23~)
- 양육·돌봄 실태 등 동물복지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 *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 및 조사방식 개선(23~)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반려동물영양·동물실험 등 정보 연계통합(23. ISP수립)

출처: [2023 정부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정애 의원안: 개·고양이 식용 판매 금지 등](#) 2021. 2.

[태영호 의원안 등: 개·고양이 식용 판매 금지 등](#) 2023. 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 9.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위헌 심판대에 설 수도](#) 법률신문 2024. 1. 17.

[공청회도 없이 개식용금지법 제정...위헌소송내면 현재 판단은](#) 중앙일보 2024. 1. 14.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020. 7. 22.

□ 대만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연혁

- 대만의 경우 1998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 식용 과정에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가 2017년 4월 26일 전국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 개를 도살하여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 구매, 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위반사실, 성명,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위반자에 대하여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소유나 동물입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관할 당국은 해당 동물을 압수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온 대만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민간의 인식 개선, 개 식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위생적 문제 대두, 국제사회로부터의 개 식용 문제 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 조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대만은 1998년 「동물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최근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 개정까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를 취해오면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온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개 사육, 도축, 판매, 식용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라. 마약류 규제 강화

개요

대한민국은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근절하고, 마약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법률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p><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첫째,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면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다섯째, 클럽, 유흥·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소에 대하여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4-01-0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과제목표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

주요 내용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 확대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 구축

-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 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중독, 손상 등) 예방정책 수립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 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

2023 정부 업무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1. 9.)

2.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AS	단속 중심의 공급억제 관리 치중	TO	예방·재활정책을 강화해 수요억제 병행
IS	부처별로 소관 관리업무에 집중	BE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차원 종합관리 추진
	단편적·분절적 대응으로 관리 한계		예방·단속·재활의 선순환 관리체계 확립

①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 강화

- **예방교육**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형 예방교육 강화
* 메타버스·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등 예방서비스 다양화
- **유입차단**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단축(52→40일)으로 신종마약류 유입 신속 차단과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불시점검, 대마 재배관리 표준조례안 및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마련(CCTV 설치 등)
- **적정투약** 의사가 과다투약을 점검할 수 있는 처방통계 정보제공 확대*와 사회적 합의로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성분(28종→32종), 주기(연1회→2회) 확대 및 수의사까지 맞춤형 통계 제공
** 오남용 우려 약물군(마약 진통제, 프로포폴 등)부터 우선 확대 추진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 감시 강화

- **빅데이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 강화
* 비정상적 과다처방,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 처방전 사용 등 감시 알고리즘 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조치·대응 강화
- **적법강화**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대상·용량·기간 등)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효능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22) 식육억제제, 프로포폴 등 5개 효능군(28개 성분) → (23) + ADHD 치료제(29개 성분)

③ 온전한 사회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재활 기반 강화

- **인프라 확대**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대상·약물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및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 추진
* 중독재활센터(누적) : (22) 2개소 → (23) 3개소 → (24~) 17개 시도 확대 추진
- **연계·협력** 범부처(법무·복지·대검·식약)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 정보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예시) 투약정보, 치료·재활교육 이수현황 등 연계 →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사회재활 활용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한 처분내역의 통지 의무화](#) 2023. 4.

[최연숙 의원안: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본인 처방 및 가족 처방 금지 등](#) 2023. 2.

[강기윤 의원안: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2023. 9.

[김미애 의원안: 마약류 범죄 장소 등 제공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신설](#) 2023. 9.

[한정애 의원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위법한 마약류 처방에 대한 처벌 강화](#) 2023. 11.

[최영희 의원안: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2023. 11.

[최연숙 의원안: 치료보호기관 시설·인력요건 규정 등 관리체계 정비](#) 2023. 11.

[최영희 의원안: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규정 신설](#) 2023. 9.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한다: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 제2차](#)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올해 6월,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식약처,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검찰청 누리집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 3. 10.

다크웹·SNS·암호화폐를 이용해 일반인이 손쉽게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범죄 관련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는 다크웹·SNS,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소단계에서는 마약투약이나 마약거래의 일시·장소·마약종류를 특정하기가 점차 곤란해져 공소사실의 특징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마약접근성이 높아지고 마약류의 타인투약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마약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기소·처벌 단계에서 종합적인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